

# 2023년 학생 대상 인권 현황 조사 결과 요약본

## I. 조사의 목적

현 설문조사는 2023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이며, 해당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 감수성 현황 및 교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해당 실태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재학생률이 41.6% (2022년 대학정보공시 기준<sup>1)</sup>)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대한민국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인권 관련 인식 현황 또한 함께 파악하고, 인권침해 실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 피해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II. 조사 개요

□ 대상: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 616명 <sup>2)</sup> (2023년 6월 기준)

□ 조사 기간: 2023년 6월 14일 ~ 2023년 6월 30까지

□ 응답자 수: 201명 (전년 대비 71명▲)

□ 응답률: 32.6% (201/616<sup>3)</sup>) (전년 대비 11.9%▲)

□ 조사 방법: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 중복응답자 5명의 첫 응답 제외 후 취합

## III. 조사 결과 요약

□ 응답자 특성 및 성·인권 관련 현황 분석

- 응답자의 성별은 남녀 각 50%로 1:1로 응답하였으며, 전년대비 응답율이 11.9% 상승하였음
-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93명(4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와 40대가 각 61명(30%), 43명(21%)임

1) (외국인학생수/전체 재학생 수) (총 외국인 유학생(313명)/전체 재학생(752명))

2) 휴학생 미포함

3) 설문 응답자: 2023년 6.12일 기준 전체 재학생

- 석사과정생이 9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201명 중 45%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은 ‘동남아시아권’이 56명(28%), ‘아프리카권’이 34명(17%) 순으로 응답함
- 자가평가 문항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는 비율이 전체 87%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인권·성인지 감수성’에서는 대한민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간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이슈 관심도’는 외국인 학생(5점 중 4.35점)과 대한민국 학생(5점 중 3.74점)간 지수 차이가 유의미함
- 인권침해 발생 원인은 ‘인권침해에 관한 이해도 부족’(39%),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27.4%), ‘문화별 차이’(14.4%), ‘낮은 처벌 규정’(8%), ‘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5.5%) 순으로 높음
- 대한민국 학생은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41.8%)와 ‘인권침해에 관한 이해도 부족’(30.8%)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나, 외국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도 부족’(46.4%)과 문화별 차이(20%)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음
- 외국 학생의 경우에는 기타 인종차별 문제를 보고함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원인은 ‘침해에 대한 이해도 부족’(33.3%), 낮은 처벌규정(28.4%), 문화별 차이(11.9%),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10.4%) 순으로 높음
-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우 ‘인권침해에 관한 이해도 부족’(35.2%)와 ‘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13.2%)를 주요 원인으로 본 반면, 외국 학생은 ‘침해에 관한 이해도 부족’(31.8%), ‘낮은 처벌 규정’(24.5%), ‘문화별 차이’(18.2%) 순으로 응답하였음
- ‘낮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외국 학생(24.5%)에 비해 대한민국 학생(3.3%)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고, ‘문화별 차이’도 외국 학생(18.2%) 대비 대한민국 학생(4.4%)은 낮은 응답율을 보임. 한편 ‘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학생(13.2%) 대비 외국 학생(3.6%) 응답률이 낮은 편으로 국내·국외 학생간 주요 원인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었음
- 인권교육은 83.6%가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대한민국 학생은 90%, 외국 학생은 78%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 유경험자의 48.8%(82명)이 ‘온·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받았고’, ‘온라인 교육만 받은 사람’은 33.3%(56명), ‘오프라인 교육만 받은 사람’은 17.9%(30명)임

-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교육유경험자의 50.6%(85명)를 차지함
- ‘교육 이수 후 인권의식이 높아졌거나’(71.4%), ‘보통’(22%)이라고 답한 비율이 93.4%로 인권교육의 경험이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 성·인권 감수성 현황

- 인권감수성 점수는 50점 중 평균 40.46점으로 작년 대비 1.4점 증가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생은 42.52점, 외국 학생은 38.76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99%(‘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이하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산정함)가 ‘나의 인권과 함께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 혐오에 대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응답은 114명(56.7%) / ‘개인의 문제’라는 응답이 34명(16.9%)로 나타남
  - ‘친밀감 형성을 위해 인종이나 나이와 같은 개인의 특징을 희화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응답이 172명으로 85%를 차지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정보 등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69.7%인데 반해 ‘희생될 수 있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남
  - ‘작은 조직이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면 안된다’는 응답이 64.2%, ‘소문이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16.4%로 나타남
  - 응답자의 23.8%는 ‘학대 피해를 알리고 싶지 않는 사람을 도우면 일이 커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48.8%로 응답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위하여 쉬운 업무만 맡기는게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7%를 차지하였고, 다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26.9%를 차지함
- 
- 성인지 감수성 점수는 90점 중 평균 77.5점으로 작년 대비 2.02점 증가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생은 80.78점, 외국 학생은 74.83점으로 나타남
  - ‘반가움의 표시로 하는 접촉은 성희롱’이라는 응답은 75.6%, ‘성희롱이 아니’라는 응답은 7.5%로 나타남
  - ‘칭찬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55.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성희롱이 아니’라는 응답도 20.4%를 차지함
  - ‘외모나 몸매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말을 종종 건내는 편’이라는 응답이 8.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0.2%로 나타났으며, ‘친한 친구들간의 대화에서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품평 등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94.5%를 차지하였음
  - ‘친근감을 표현하는 가벼운 스킨십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8.2%인 반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4%를 차지함
  - ‘상대방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예의상 거절이나 좋으면서도 튕기는 것이

- ‘아니’라는 응답은 67.7%,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 거절이 없으면 동의가 아니’라는 응답은 85.6%, ‘침묵은 허락이 아니’라는 응답은 83%로 나타남
- ‘피해자의 일방적인 느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응답은 35.4%이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3%, ‘보통’이라는 응답도 32.3%로 의견이 분분함
- ‘지속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아니라 문제가 된다’는 응답은 65.1%, ‘상대방이 거절하였어도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응답은 80.1%로 나타남
- ‘연인사이에는 상대가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96.1%를, ‘연인사이나 친밀한 사이에 이미 과거의 특정 스킨십에 대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다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85.5%를 차지함

#### □ 캠퍼스 내 성·인권 관련 환경 평가

- 응답자의 87.1%가 ‘대학원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대학원에서 겪는 인권침해적 문제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66.2%이며, 11%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함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침해적 불편감을 겪은 경험’에 대하여 ‘없다’는 응답이 64.2%, ‘겪었다’는 응답이 20.9%를 차지함
- ‘교수-학생간 갑질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2.5%(5명), ‘없다’는 응답은 88.6%(178명)였음
- ‘대학원에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이 없다’는 응답은 76.6%, ‘존재한다’는 응답은 10.5%(21명)으로 나타남
- ‘대학원에 갑질이나 성폭력 외에 다름에 의한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11.4%,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1%를 차지함

#### □ 캠퍼스 내 성·인권 침해의 경험

- ‘대학원에서 두발, 복장 등의 간섭이나 강요, 차별, 놀림 등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1.5%를 차지하였으며, ‘유경험’ 비율은 작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유경험자 중 92.9%가 ‘학생으로부터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 대학원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정한 징계나 처벌’,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평등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원치 않는 모임 등에 참여를 강요받았거나, 원하지 않은 음주·가무·분위기 띄우기 등을 강요받았다’는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 났으나, ‘사생활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질문을 받았거나 차별이나 놀림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6명으로 8%를 차지함
-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2.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료 학생으로부터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9명임. 내용은 주로 농담조로 하는 성희롱이었음
  - 대학원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학업 연구 근무 등의 업무 외의 사적인 만남을 강요당하거나 원치 않은 연락을 지속해서 받은 경험은 없다고 답하였으나, 대학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집요하게 쫓아오는 것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명 있었음
  - 학습권 및 노동권 침해 경험 질문에 대해 2022년에 비해 ‘학업·진로 상담부족’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불충분 보장’, ‘특정 수업 수강요청 또는 제한’항목은 개선되었으나,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충실한 수업을 받지 못함’, ‘교과 과정 임의변경’, ‘연구자원 접근제한’, ‘연구주제 외 강제동원’항목은 경험자수가 증가하였음

#### □ 인권침해의 예방과 대응

- 인권침해 발생시 ‘인권센터에 알려 조치를 취함’(57.2%), ‘가족, 친구 및 지인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함’(18.4%), ‘행위자에게 반박 등을 함’(14.4%) 순으로 대처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임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교육, 캠페인, 홍보 등 활동’(4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 처벌’(40.8%), ‘소통창구 활성화’(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대학원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향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는 ‘소규모 교육 등 상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36.8%), ‘규정 개정을 통한 처벌 등의 강화’(32.3%), ‘익명성을 보장한 소통창구의 활성화’(24.4%), ‘기관장의 의지표명’(4%), ‘기타’(2.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인권침해 발생시 필요한 조치로는 ‘분리조치’(28.9%), ‘피해자 회복지원’(27.4%), ‘행위자 처벌 및 교육’(26.4%), ‘재발방지 노력’(16.4%), ‘기타’(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 있음
- 인권침해 발생 후 본인의 의사와 다른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청’(30.8%), ‘다른 소통창구 이용’(25.9%),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임’(18.9%), ‘다른 분리방안 요청’(11.4%), ‘법적 대응’(11.4%), ‘기타’(3%) 순으로 응답함. 기타 응답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임

## □ 인권침해의 목적(제3자 경험)

- ‘제3자로서 인권침해 목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56명(77.6%), ‘있다’는 응답이 29명(14.4%)로 나타남
- 목격한 인권침해 유형은 2022년의 경우 ‘차별·무시’, ‘스토킹’, ‘성희롱·성폭력’, ‘물리적 폭행 또는 위협행위’, ‘폭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에는 ‘성희롱·성폭력’(8명), ‘차별·무시’(7명), ‘갑질·괴롭힘’(4명), ‘폭언’(4명), ‘물리적 폭행 또는 위협행위’(3명), ‘스토킹’(1명), ‘기타’(1명) 순으로 다양하게 응답함
- 목격 시 대처에 대해 응답자는 ‘피해자를 도와줌’(12명), ‘행위자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함’(8명),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대응’(2명), ‘인권센터에 알림’(2명), ‘아무 것도 하지 못함’(2명), ‘경찰서에 같이 동행함’(1명) 순으로 응답함
-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함

## □ 인권센터의 이용

- 대학원 내 인권센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91.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대비 8.4% 증가함
- 인권센터 소식을 접한 경로는 인권교육(54.3%), 포스터 및 안내게시판(33.2%), 카드 뉴스(4.9%), 주변인(4.3%), 상담 및 신고경험(2.2%), 기타(1.1%) 순임
- 대학원 내 인권침해 발생시 인권센터 이용 의사에 대해 86.6%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작년 대비 1.9% 하락한 수치임
- 인권센터 이용시 가장 바라는 바는 비밀유지로 전체 25.4%를 차지하였고, 공정한 조사(17.9%), 피해자보호(16.9%),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조치(12.9%),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9.5%), 제도개선(3%) 순이었고, 무응답자는 28명으로 13.9%임
- 기타 전체 다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 인권센터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28.4%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이 방문사실을 알까봐(18.9%),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12.4%),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10.9%), 인권센터의 역할을 잘 모름(7.5%),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7.5%), 기타(6.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8%가 무응답하였음
- 기타 목적은 했지만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의견 있음
- 인권센터에 바라는 바와 역할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소통창구의 활성화’였으며, 교육의 활성화, 피해자 보호조치,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법률적 도움 제공, 제도개선 노력, 행위자 제재 조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IV. 조사결과와 시사점 요약

##### □ 인권 현황

- 응답자의 응답에 따르면 KDIS 학생들의 인권·성인지 감수성 지수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 한국 학생들의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응답자의 약 90%가 인권교육을 받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받은 응답자도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2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도 상당수 있는 등 인권교육에 적극적임
-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작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건발생시 대응책으로 비밀유지와 피해자보호가 매우 필요해 보임
- 설문문항 이외에 주관식 응답(기타)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와 KDI 대학원의 특성상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별도 설문문항 분석이 필요함

##### □ 인권침해 경험 결과 관련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 ○ 예방 및 상담·신고 단계

- (인권교육개발)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KDI School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가 포함된 국적·인종 등에 따른 차별, 성희롱, 혐오표현의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표준강의안과 온라인 강의)을 자체적으로 개발 필요
  - ※ 현재 개발된 예방교육의 대부분은 국내용을 영문화한 것이며 다소 추상적임
- (교육 이수 독려) 구성원 전체가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및 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독려 필요
- (동료강사 양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학생(동료, 선후배, 졸업생 포함)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검토
- (적극적 홍보) 인권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소규모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상시 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 응답이 36.8% 차지
- (소통창구 다양화) 인권센터의 소통창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직접 찾아오는 것을 꺼리거나 상담만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SNS DM 등 활용방안, 지역사회 연계형 상담서비스 제공 적극 검토
- (상담·신고창구 개선) 현재는 QR코드를 통하여 익명(또는 가명) 신고가 가능하고 메일주소는 노출되지 않으나 프로필이나 사진이 전송될 수 있음. 작은 커뮤니티

- 니티이고 신고서를 짧은 시간에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익명 신고 앱(예: 리슨투미)을 통해 더욱 신뢰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필요
-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교내·외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활용하여 분기별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 필요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계

○ 조사 단계

- (선행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하여 1) 신고인 익명성 보장, 2) 즉각적인 분리 조치, 3) 피해자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 ※ 센터로 상담·신고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더 간명하게 게시 필요
- (후속 조치) 위원회 결정시 징계 등 개인에 대한 권고 이외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권고도 포함될 필요 있음(예: 규정개정, 매뉴얼·지침서 마련 등)

○ 기타

- (행정 절차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 등 학사행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생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신고의사 여부 확인 ② 신고의사는 없으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권조사 ③ 실태조사 후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 개선(예: 스톱킹처벌법 등 우리나라 법률·제도 교육) ④ 제도개선(안) 공지로 신뢰도 향상